

해방과 분단, 그리고 언어 환경의 변화

김하수

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들어가기

그동안 우리말의 환경은 달라진 듯 달라지지 않았고, 그대로인 듯 달라져 왔다. 지나간 시간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모두 언어 문제로 귀결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으나 되도록 이 세상 문제와 언어 문제를 촘촘하게 꿰 보려 한다. 서술 방식은 연대기적 방식, 문제 중심의 방식, 인과 관계 중심의 방식을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섞어 썼다.

2. 분단 이전에서 분단까지

분단의 역사 70년은 분단 이전의 역사와 쉽게 분리되지 않는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다. 분단과 분단 이전이 서로 무관한 두 토막의 시대가 아니라는 말이다. 분단 이전은 당연히 식민지 시대를 가리킨다. 한국은 식민 지배의 종결로 해방이 되었고, 해방은 동시에 분단을 불러왔다. 해방과 분단이라는 함께하기 어려운 상극이 마치 자연스러운 결합인

듯 지내 온 70년이기도 하다.

근대 사회의 식민지 역사에서 조선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식민지가 된 곳이었다. ‘사실상’이라는 말을 붙이는 까닭은 조선 다음에 식민지가 된 곳은 이란, 소말리아, 모로코 등 몇몇 보호령들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조금 더 잘 버텼으면 식민지까지 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미 식민지 확장 경쟁은 끝나기 때문이다. “한 10여 년만 더 견딜 수만 있었다면…….”이라는 가정은 어떤 점에서는 무의미한 공상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선 왕조가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했던 시대 변화는 폭력적으로 다가왔다. 아니 다가온 폭력이 문제는 아니었다. 모든 사회적 변혁과 시대의 변화는 폭력을 중요한 매개로 삼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내전과 내란이 그랬고, 프랑스의 혁명, 독일의 혁명 실패와 유혈 사태가, 그리고 미국의 독립 전쟁과 내전이 그렇다. 문제는 내부적 폭력이나 아니면 외부적 폭력이나이다. 갑신정변과 갑오농민전쟁은 내부적 폭력을 이용하여 사회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였으나 역량 부족으로 실패하였고, 결국 조선은 청, 일본, 러시아 등의 외부적 폭력에 시달리다가 식민지로 전락했다.

이렇게 내외의 폭력에 시달리던 즈음에 한국어는 드러나지 않게 근대를 준비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시대에 준비한 ‘언어적 근대’는 해방과 분단 이후 남과 북을 잇는, 가늘지만 질기디 질긴 명주실이 되었다.

한국 사회의 근대는 일단 일본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갑오개혁(갑오경장)’과 그에 따른 ‘열네 가지 큰 법(홍범 14조)’에 그 기본 형식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때 내린 칙령 제1호와 그다음 해의 칙령 제86호 9조에 의해서 한글은 법적으로 ‘국문’이 되었다. 곧이어 독립협회의 기관지

로 출발한 《독립신문》은 무명의 소장 학자 주시경을 등장시켰다. ‘독립협회’는 애당초 반청(반중국)적 성격이 강했다. 그들이 말한 ‘독립’도 중국 천하에서 탈출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독립신문》의 한 면이 영어로 편집될 정도로 서양 세계에 편향적이었다. 주시경이 개인적으로 어찌 언어 문제에 천착하게 되었는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가 놓은 주춧돌과 그 후예들의 활동은 근대 사회의 시민적 문화 권력의 핵심을 정확하게 겨누는 충구 역할을 했다. 청일전쟁으로 청에게서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물려받았다고 자부한 일본은 이것이 ‘대일본제국의 시작’이 아니라 ‘조선 근대화의 시작’이었음을 매우 뒤늦게 깨달았다.

근대 사회는 군주의 권한보다 시민의 권한이 핵심이다. 그러나 그 시민은 폭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무장 해제되어 있다. 그리고 오로지 ‘말’로 권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 구조를 언어화한 ‘법’을 기초로 법치 국가를 지향하며, 언어를 매개로 하는 대의 정치, 곧 의회 제도를 중시한다. 또 온갖 정치적 견해와 선전을 언어로 정리, 보도하여 ‘여론’을 조정해 나간다.

전근대는 신분과 계급이 명료한 사회였다. 그리고 신분과 계급은 세습되었다. 그러나 근대 사회는 이것을 ‘보편적 교육’으로 허물어뜨렸다. 그래서 근대 교육의 수단으로 근대성을 갖춘 ‘언어’가 필요했다. 또 그 ‘언어’로 교육의 성과를 평가해 선별된 사람들을 더 높은 단계로 진학시키고, 여러 가지 국가 고시를 시행해 권력과 이익을 재분배해야 했다. 이렇게 신분과 계급의 정당성은 사라졌고 언어를 매개로 하는 개인적 능력과 전문적 지식만이 유일한 정당성의 근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언어는 시민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 되었다.

식민 사회는 어떤 부문에서는 근대화를 촉진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부문에서는 근대화를 지연시키는 작용도 했다. 그래서 사회를 불균형, 비대칭, 불안정 상태에 빠뜨려 사회 통합을 이루기 어렵게 했다. 식민 시대의 조선인들이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구나!’ 하는 의식을 잠시나마 가져 본 것은 3·1운동,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사정 같은 언어 운동 정도가 아니었을까 한다. 근대화의 선두 주자였던 서유럽과 북미, 그리고 일본은 자신들의 일상 언어를 근대 사회의 소통 수단으로 삼았다. 그 언어들은 그만큼 이미 근대성을 갖춘 상태였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고 식민지가 된 지역에서는 대부분 타자의 언어로 근대화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시민 사회의 형성과 소통 망이 견고하지 못하거나 무척 느리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공식적인 ‘권력의 언어’ 구실을 해 본 적이 없던 한국어가 무척 짧은 시간 안에 변신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런 사례는 그리 흔하지 않다. 유대인들의 솔로몬 이야기나 탈무드 또는 잠언서 같은 한국어로 쓰인 ‘지혜(智慧)의 서(書)’도 찾을 수 없어서 겨우 중국의 《채근담(菜根譚)》 정도를 걸눈질하며 지내 왔고, 이집트인이나 티베트인처럼 《사자(死者)의 서(書)》로 영혼과 대화해 본 적도 없는 한국어였다. 그 언어로 쓰인 고전 문헌이 많은 것도 아니고, 풍부한 경전이나 법전을 가졌던 바도 없다. 위대한 서사시나 대하 희곡 한 편도 찾을 수 없는 처지로 근대 사회의 유일한 소통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 신기하기 짝이 없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초기의 국어학에는 불가피하게 학문의 성격과 사회 운동의 성격이 혼재해 있었다. 그로 말미암은 학술적 태도와 민족 문제에 대한 감응적 태도는 아직까지 한국 학계의 반점처럼 남아 있다. 그것은 한국 사회만의 특성이 아니라 시대 변화를 겪는 모든 사회가 거치는 일종의 성장통이었다. 미국의 건국사가 청교도 신앙 문제와 얽혀 있듯이, 영국의 근

대화가 엘리자베스 1세의 지엄한 애국심과 튜더 가문의 반가톨릭 정신이 섞여 이루어졌듯이, 프랑스 애국주의 근저에 나폴레옹에 대한 환상이 곁들여 있듯이, 그것은 식민지 조선이 앓던 흥역이 남긴 자국이다. 당시에 국어학자들은 우리의 언어 문제를 논하면서 ‘훈민정음’과 ‘세종’을 호출해 냈으며 대중은 이에 화답했다. 한국어 연구와 한글 운동은 이렇게 합체를 이루었다.

3. 언어와 권력

해방의 그 순간, 민족 권력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임시정부는 허둥지둥 귀국하여 군정청 권력에 끼어들지도 못하고 있었다. 내부의 사회 운동 세력들도 숨을 잠시 멈추거나 고르고 있어야 했다. 오로지 감옥에서 금방 나온 조선어학회의 일꾼들만이 이미 준비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언어 규범이었다. 비록 아직 어설픈 규범이었지만 급한 대로 교과서를 만들 수 있었고, 공문서를 적어 나갈 수도 있었다. 출판물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었다.

중요한 점은 당시에 긴급히 국어 교과서를 편찬하는 일과 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일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조선어학회가 담당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 역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우리의 언어 규범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것이 주시경이 1896년 《독립신문》에 관여하고 1907년 국문연구소에 참여하면서 남긴 자취를 이어받은 후예들이 1921년에 일군 ‘조선어학회’가 꾸준히 준비해 온 언어적 근대화 작업의 결과물이었다.

해방 이후 두 개의 정권이 들어서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

았다. 양쪽의 새 정권은 언어의 권력이 자신의 주변에 있지 않다는 것이 꼭 불편했던 모양이었다. 북에서는 부수상인 김두봉의 주도 아래 <조선어신철자법>이 등장했다(1948). 남에서는 한글 맞춤법을 간소화 하자는 주장이 대통령의 주도로 등장했다(1949). 그 뒤 북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조선어신철자법>이 사문화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접하기는 어렵다. 단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부 책임자들에 대한 비판으로 어렵פות이 심각한 정치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할 뿐이다. 남에서는 1955년까지 시간을 끌며 이른바 ‘한글 파동’이라는 시사 용어를 남기기도 하였다.

조선 왕조가 내부 폭력으로 새 시대를 맞이하지 못하고 외부 폭력에 무너졌듯이 남과 북의 두 정권도 내부 폭력으로 충돌했으나 그 결과는 국제적인 전쟁으로 번졌다. 조그마한 국토에 제2차 세계대전 참전국을 능가하는 여러 나라의 지원군이 뛰어 들었다. 반세기 만에 똑같은 실수가 반복된 것이다. 그리고 60년 남짓 분단 체제에서 정상인 듯, 비정상인 듯 공존하고 있다. 한국적인, 그리고 이제는 별로 새롭지 않은 ‘뉴 노멀’ 상태가 되어 가고 있다.

전쟁 이후 양쪽은 진정 새로운 건국 사업을 진행해야 했다. 남쪽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 초기에 ‘한글전용법’을 제정하였다. 달랑 한 줄짜리 법이었지만 1894년에 공포된 ‘열네 가지 큰 법’과 국문에 관한 칙령 이후 50여 년 만에 – 비록 언어가 아닌 문자 사용에 대한 규정이었다 하더라도 – 우리의 언어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공감대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 해방 직전에 조선어학회가 준비하다 중단된 큰사전 편찬 사업은 해방 이후에 계속되어야 했다. 맞춤법의 관리와 손질, 국어 교육, 사전 편찬 등의 막중한 대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은 국가

는 물론 일반 민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한글학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최현배는 문교부 편수국장을 맡아 교과서 편찬에 관한 책임을 맡았다. 교과서 편찬권은 또 다른 언어 권력이 가능했음을 보여주었다. 순우리말 어휘가 교과서에서 오래된 어휘를 대체해 나가기 시작했다. 당시의 추진 세력이 그 의미의 중차대성과 예민함을 알았는지는 판단할 길이 없지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언어를 입히는 일은 상당한 역풍과 반동을 불러왔다. 어느 시대에도, 어느 지역에서도 이러한 구조 재편에 순순히 물러나는 낡은 세력은 없는 법이다.

전쟁이 끝나고 1955년이 되어 비로소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을 구성하게 되면서 국어학계에는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나타났다. 문법 용어를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사실 국어학계의 이와 같은 논쟁과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해방 이전에 맞춤법 문제를 두고도 매우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그럴 때마다 조선어학회는 정면 돌파를 해냈다. 그만큼 역량이 강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제의 마지막 악수인 ‘국어 상용화(일본어 강요)’와 ‘조선어학회 사건’은 조선어학회에 정당성을 주었다. 그 정당성은 앞에서 말한 언어 규범에 대한 관리권을 모두 이의 없이 인정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의 한글학회는 이미 해방 직후와는 성격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남북 분단 상황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뚜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던 일부 유능한 구성원들이 북으로 넘어갔다. 국토와 정권만 분단된 것이 아니었다. 조선어학회도 분단된 것이었다. 그 때문에 이름도 한글학회로 바꾸었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인적 손실을 많이 입은 상태에서 또 한 번 역량이 소모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 고등교육 기관이 많아지면서 식민지 시대와는 달리 다양한 성격의 전문가와 학자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생

졌고, 여러 신문과 잡지가 그들에게 견해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조선어학회가 해방 이전에 가졌던 정예 논객을 중심으로 한 일사불란한 담론 싸움의 환경이 이미 시민 사회적 성격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글학회의 규범 장악을 불만스러워했던 세력은 ‘과학’의 담론으로 무장했다. 자연스럽게 한글학회는 ‘민족’의 담론으로 맞섰다. 언어 규범으로 논쟁을 벌이면서 ‘과학’과 ‘민족’이 싸웠다는 것은 이제 와서 보면 하나의 희극처럼 보인다. 주권 국가의 언어 규범은 당연히 과학적이면서 동시에 민족적이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당시의 논쟁 수준은 그랬다. 민족 문제를 이야기하면 비과학적인 것처럼 보였고, 과학 문제를 이야기하면 비민족적인 것처럼 보였다.

돌이켜 보면, 한글학회가 조선어학회의 전통을 잘 이어받아 무리 없이 언어 규범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위치를 확보하려 했다면 당시의 변화된 사회 환경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었다. 식민지 시대에는 일본과의 민족적 갈등이나 분노가 학회에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는 전략과 전술이 달라져야 했다. 시민 사회에 적응해야 했고 시민적 지도력이 필요했다. 뒤늦은 후회이지만 학술 조직과 시민운동 조직으로 나누거나 별개의 활동 전선을 가지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이미 유효하지 않은 진단만 내릴 뿐이다. 민족 담론도 민족 분단의 문제를 원활하게 설명할 수 없으면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속전속결로 치달은 새로운 순우리말 어휘의 보급은 짐작컨대 예상보다 더 많은 적을 만들었을 듯하다. 새로운 어휘가 교과서에 실릴 때마다 구세대들은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자신의 지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낡은 것으로 치부되는 상황을 어느 누가 쉽게 받아들였

겠는가? 그 틈새를 ‘조어론적으로 비과학적이다.’라며 공격을 해 대면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궁지에 몰리기 쉽다. 사실 조어론은 과학이라기 보다는 언어적 인습에 더 가깝다. 그런 와중에서도 조어론적으로 설명이 쉽지 않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다리꼴, 마름모꼴, 제곱’ 등이 살아남은 것이 실로 대견하기만 하다.

4. 국가가 앞장서다

결국 1960년대 들어서 문법 용어를 많이 알려진 한자어 용어로 할 것인가 아니면 순우리말 용어로 할 것인가의 문제를 정부 주도로 판가름하게 되었다. 이로써 해방 이후 10여 년 동안 언어 규범 주도권을 가졌던 한글학회는 그 권위를 잃게 된다. 달라진 환경에 전략적으로 적응을 못하고 방황하는 그 틈새를 국가 권력이 파고 들어온 것이다.

역시 때늦은 조언이지만 용어 문제를 순우리말이나 한자어나 하는 언어 형식을 둘러싼 다툼처럼 보이게 한 것이 안타까운 패착이었다. 언어 형식을 넘어 ‘개념’ 논쟁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었다. 한국어의 형용사를 유럽계 언어의 형용사와 과연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지, 한국어에 대명사가 독립적인 품사 구성 능력이 있는지, 의존 명사가 겨우 ‘의존적’인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통사적 영향력이 의외로 강하다고 보아야 하지 않은지 등 ‘과학적 논쟁’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은, 순우리말이나 한자어나를 떠나 그리 간단하게 ‘다수결’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학문과 언어 발전의 변곡점에 해당하는 시점을 허무하게 흘려보낸 느낌이다.

1960년 한국 사회는 대중이 분노하면 지도자를 갈아 치울 수 있다는

큰 경험을 한다. 세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러한 경험을 한 지역은 거의 없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한국말은 그 억양이 매우 이상했다. 그러나 모두 그것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고 워낙 영어를 잘해 그런 것이라고들 했다.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의 첫 번째 통치자가 식민지 지배국 언어로 유창하게 말하는 것은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다. 이렇게 첫 번째 대통령과 작별함으로써 국민은 당시의 새로운 정치적 권위에 쉽게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 정치적 자유에는 활발한 자기표현이 뒤따르는 법이었다. 수많은 시위가 잇따랐다. 분단 극복을 위한 주장도 많았고, 욕구 불만의 언어도 많이 분출했다. 또 분열도 극심했다. 2년을 겨우 넘기며 또다시 정변을 맞았다.

이때부터 국가는 매우 바쁘게 움직였다. 국민에게 할 말도 많아졌다. 그래서 1961년 말에 국영 텔레비전 방송국이 창설되었다. 그전에도 작은 민간 텔레비전 방송국이 있었는데(종일 방송이 아니었음) 화재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영어를 모르면서도 미군 방송(AFKN)을 보는 수밖에 없었다. 후에 문화방송이라는 민간 텔레비전 방송국이 생기면서 국민은 시사 정보 및 오락 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다. 텔레비전은 또 광고도 방영했다. 산업화 과정이 홍보물로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이 인상적으로 기억하게 되었다.

1960년대 중반 한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가 트였다. 사회적으로 갈등이 매우 심했지만 일단 물꼬가 트이자 일본인 관광객들도 자주 보게 되었고, 특히 일본계 회사가 많아지면서 일자리도 늘어났다. 일본어 학원이 많아졌고, 대학에 일본어 학과들이 점점 눈에 띄기 시작했다. '재일 교포'라는 말은 부유층을 일컫는 말처럼 해석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일본에 기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지만 스포츠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벌어졌다. 레슬링, 권투, 여자 농구와 같은 종목에

서는 일본과 치열하게 싸웠다. 이기면 영웅이 되었고 지면 손가락질을 받았다.

산업화는 새로운 문물을 불러들였다. 자연히 새로운 어휘도 많아졌다. 텔레비전에서는 ‘쇼, 코메디, 탈렌트, 스타’와 같은 말들이 나타났고, 광고에서도 갖가지 의약품, 드링크, 가정용품, 옷가지 등의 유형과 품목들이 소개됐다. ‘메리야쓰’나 ‘와이샤쓰’ 같은 말이 그 틈바구니에 있었고, ‘페인트’나 ‘머플러’ 같은 말이 구닥다리 같은 ‘뽕끼’와 ‘마후라’를 대체했다. ‘하이힐’은 ‘뽕죽구두’와 ‘하이루’를 퇴치해 버렸다. 어느덧 ‘반도호텔’은 ‘롯데호텔’로, ‘반도극장’은 ‘피카디리극장’으로, ‘수도극장’은 ‘스카라극장’으로 품격을 높였다. ‘워커힐’은 품위 있는 외국인들을 모시는 고급 접대 장소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통속어에는 수많은 일본어 어휘들, 아니면 망가진 일본어들이 혼하게 굴러다녔다. 거리에는 ‘쓰리꾼’이 횡행했고, 권력가에게는 ‘와이로’를 먹이거나 ‘사바사바’를 했다. 정치인들은 정적을 ‘사꾸라’라고 비난했다. 일본어를 한자어로 읽으면 의젓한 공용어가 되었고, 일본어 발음으로 받아들이면 비속어가 되는 세상이었다. 어찌 되었건 이 모든 것은 북쪽 정부에서 남쪽의 언어 환경과 상태를 비판하면서 이른바 ‘문화어’를 선언하게 된 빌미가 된다.

5. 남과 북의 정책들

한편 북쪽에서는 광복 직후부터 준비된 언어 정책이 숨 가쁘게 돌아갔다. 정부를 수립하자 빠르게 문맹 퇴치 운동에 들어간다. 이 운동의 귀결은 한자 폐지이다. 한자를 놔 둔 채 문맹 퇴치는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한자를 폐지하자면 수많은 동음이의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것은 또 어휘 순화(말 다듬기)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에서는 <조선어 철자법>을 시행함으로써 남과 북의 언어 규범에 큼직한 틈바구니를 만들었다. 여기에서 나타난 규범의 차이를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규범의 차이를 만들어 낸 태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에서는 우리의 언어를 철저히 형태적 합법칙성을 근거로 체계화하려 했고, 남에서는 조음적 현상을 참조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외래어 표기법은 영어를 중심으로 한 남쪽의 체계에 비해 북쪽에서는 러시아어 어휘를 훨씬 더 많이 의식하고 있었다.

북에서는 일찍이 소련과 동유럽, 그리고 중국의 도움과 협력 속에서 사회적 안정을 갖추어 오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간단치 않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미 1950년대 헝가리의 자유화 운동이 벌어지자 소련군이 진입하여 물의를 빚은 적이 있었는데, 사회주의 우방인 소련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이다. 중국은 인도와 국경 분쟁을 일으켰다. 인도는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제3세계 비동맹 운동을 주도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친소련, 친사회주의적이었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형제국들이 더 이상 형제가 아니라는 것이 뚜렷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은 ‘주체’를 선언했다. 그리고 중국과 소련에 대해 등거리 외교를 한다. 이후 주체사상을 정치 체제의 중요 고리로 삼게 되었다.

결국 1966년 5월 14일에 작성한 것으로 된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옹계 살려나갈데 대하여”라는 글에서 남쪽 ‘표준어’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평양말을 중심으로 한 ‘문화어’를 제창했다. 그리고 이어 문화어 규범을 제정하여 그동안 사용해 온 조선어 철자법 체제를 다시 정비하여 사이표(‘)와 같은 보조 수단을 폐지했다.

북의 문화어 정책에 대한 반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종의 정치적 대응처럼 해석되는 조치가 남쪽 정부에서 시도되었다. 1970년 한글 전용 정책을 선언한 것이다. 물론 반대 여론에 밀려 2년 후에는 다시 한자 교육을 허용했지만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이었다. 이로써 '사실상' 한자 교육은 서서히 고사되는 과정에 들어섰다. 이미 1966년에 창간한 새로운 문예 비평 잡지 《창작과 비평》이 한글 전용에 가로쓰기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리고 그 이후 한글 사용과 가로쓰기가 오늘날까지 한 번도 우물거림 없이, 그러나 천천히 완성도를 높여 가는 것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 '한자'는 시대적 한계에 다다랐음을 절감할 수밖에 없다.

결국 1960년대 초반에 문법 용어 문제로 한글학회 세력은 큰 상처를 입었고, 1970년대 초반에는 스스로 훨씬 과학적이라고 생각했던 한자 친화적인 이들이 자기 한계에 부딪혔다. 이 같은 상황은 양쪽 모두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데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어야 했다. 초기에는 한글학회가 지나치게 정파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다가 실패하고 언어 규범을 관리하는 우위를 위협받게 되었으며, 한자 친화적인 견해를 가졌던 이들은 1960년대에 점점 성숙해지는 시민 세력에 공감할 주는 감응력을 갖지 못했다.

폭발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중산층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신적 소모를 줄여 주어야 했다. 이에 호응한 교육 정책이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이어지던 입시 제도의 축소와 완화였다. 1960년대의 입시 과목 축소, 실업계 고교생들에게 대학 입시 특전 부여, 그리고 1970년대 추첨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교육 부담을 감소시키며, 주변부의 삶에서도 자녀들을 대학에 진학시킬 수 있다는 꿈을 키워 주었다. 이러한 정책적인 방향에 '한자'를 필수 과

목으로, 그리고 입시에 반영시켜 한자 교육으로 시민 사회의 주력이 되려고 했다는 것은 분명히 시대착오에 가까웠다. 문법 용어의 논쟁에서 한글학회가 물러서게 된 것을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한 것이다. 승리는 새로이 일어서는 시민 사회의 것이었고, 그들의 눈치를 정확하게 읽은 정책 담당자의 몫이기도 했다.

6. 냉전

전쟁 이후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서로의 체제가 날카롭게 부딪치는 냉전 시기였다. 그러한 날카로움은 언어를 다루는 문필가들의 작품을 정치적인 기준으로 사법 처리하는 일로 이어졌다. 이것을 글이 화를 불러왔다는 뜻으로 ‘필화 사건’이라고 했다. 자연스럽게 언어 통제가 이루어졌고, 사상이나 이념을 일컫는 표현이나 의미는 삼가는 분위기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사용하던 ‘인민, 동무, 주석’과 같은 말들은 매우 거북한 단어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북에서도 ‘자유, 아가씨’와 같은 말들이 삼가는 어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쪽의 군대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면서 남과 북의 긴장은 더욱 높아졌다. 무장 군인이 침투하기도 했다. 이들을 ‘공비’라고 불렀다. 이러한 긴장 상태는 남쪽 사회에 ‘예비군’이라는 잠재적인 군사력 확대와 대학의 군사 교육 시행 등을 불러왔다. 임계점을 모르는 냉전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싸늘하기만 하던 남과 북의 한랭 전선은 1972년 7·4공동성명으로 삼시간에 뜨거운 현안으로 변모했다.

그러나 머지않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또 다시 서로 험악한 관계로 돌아갔다. 행여나 했던 희망은 속절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양측

정부는 챙길 것을 챙겼다. 북에서는 이때 ‘사회주의 헌법’으로 헌법을 개정했고, 남에서는 ‘유신헌법’으로 체제를 바꿨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때 북의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공화국의 수도를 서울에서 평양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현실화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달리 본다면 전쟁의 가능성을 대폭 줄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평양 말 중심의) 문화어의 의미도 살린 셈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의 문화어를 그리 과소평가할 일도 아니다. 한편으로는 분단을 정당화하기도 했으면서 동시에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데 공헌하기도 한 것이다.

한편 유신헌법도 비민주적인 조항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헌법에 ‘통일’ 조항을 처음 집어넣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고 값진 것이었다. 그 이전에는 휴전선 북쪽에는 소탕해야 할 일종의 ‘반란 세력’이 있을 뿐이라는 해석이었지만 영토 조항과의 모순을 무릅쓰고 ‘통일’ 조항을 삽입해 양측의 지향점을 생산적으로 바꾸었다.

1980년을 전후해 남쪽 사회는 전례 없는 정치적 격동기에 빠지게 된다. 정치권도 급격히 재편되었다. 모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동력이 오로지 ‘올림픽’에 맞추어졌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냉전 체제가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했다.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개입 이후 뒷감당을 못하면서 취약점을 드러냈다. 미국과 소련이 서로 시비하며 모스크바 올림픽과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불참하다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가장 의미 있는 만남으로 만들어 주었다. 휘청거리던 소련은 1989년 동독의 붕괴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을 타고 1991년 남과 북은 국제연합에 함께 가입한다. 냉정하게 본다면 통일 지향적이라기보다는 분단을 영구화할 위험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동독과 서독이 사실상 별개의 국가를 지향했음에도 일정한 계기에 모든 현실적 장애를 무효화하면서 통일을 성취한 예를 보더라도 그리 비관적

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 또 이 기간을 겪으면서 남쪽 사회에서는 북쪽에서 그동안 간행했던 수많은 언어 연구서들이 복간되었다. 덕분에 반세기 가까이 절연되었던 많은 북쪽의 책과 논문을 만날 수 있었고, 여기서 잊힐 뻔한 반가운 이름들을 다시 더듬어 볼 수 있었다. 이는 훗날 매우 의미 있는 산물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 시기에 남쪽에서는 언어 정책을 위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1988년에 문교부가 주관하여 한글 맞춤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1933년 제정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후 민간 주도로 유지되어 오던 언어 규범이 정부 주도로 전환되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조직화된 전담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규범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돋보이지만, 반세기 동안 이끌어 오던 민간 주도의 역량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시민 사회의 역할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일이다. 이 시기에 문교부 산하 학술원에는 국어연구소가 생겼고, 이것이 1990년 문화부로 이전되면서 ‘국립국어연구원’으로 거듭났다. 이 기관은 후에 ‘국립국어원’으로 이름과 성격을 달리하게 된다.

7. 냉전 체제 이후

이즈음 남쪽의 경제는 급성장했다. ‘삼저호황’이라고 하여 달러 가치, 석유 값, 금리 등이 낮은 수준으로 이어져 국제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지속된 것이다. 이 시기를 잘 보낸 남쪽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한동안 아시아의 네 마리 용(또는 호랑이)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시 문화혁명의 후유증 치유에 여념이 없었던 중국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경제 성장도 성취한 남쪽은

위기에 빠진 사회주의권을 향해 이른바 ‘북방 정책’을 시도했다. 반공의 최전선에서 대담하게 유연한 정책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기에는 소련의 해체 과정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과 중국의 연변 자치주에 거주하던 ‘재중 동포’들이 국어학자들의 조명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해 주거나 문화적 동질감과 유대 의식을 강화해 주기보다는 그들의 언어 규범이 문화어에 가깝다는 이유로 계몽과 개조의 대상으로 삼고 말았다. 그들이 70여 년 내지 100여 년을 사용했던 ‘모어’의 정당성을 오로지 1936년에 사정된 표준어를 근거로 부정적으로 다룬 것은 크나큰 실책이었다. 그들이 문화적으로 처했던 열악한 조건을 어떻게 의미 있게 극복해 왔는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 어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일말의 애정도 없는 오만한 태도였다. 그동안 그들이 일구어 놓은 성과, 예를 들어 문학 작품, 연극, 방송 자료, 노래, 신문과 잡지, 교과서, 민담 자료 등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비로소 약간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점점 서로 남남처럼 지내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남쪽 사회는 자신감을 가지고 국제 관계를 보게 되었다. 국제화니 세계화니 하는 말도 자신 있게 사용했고, 우루과이 라운드와 같은 시장의 자유화 문제를 대범하게 다루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들도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의 언어를 외국인에게 가르치는 일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이 밑바탕이 되어 교육부는 1995년부터 준비를 시작해 1997년부터는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시행했다. 문화부도 뒤이어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토대 구축에 힘쓰다가 2001년에는 ‘한국어세계화재단’으로 발전시켰다. 또 국립국어원이 주도하여 2012년에는 ‘세종학당재단’이 설립되어 해외의 한국

어 교육에 더 큰 추진력을 더하게 되었다. 2015년 현재 54개국 130군데에 세종학당이 연결되어 있다. 초기에는 조직망 확대에 주력한 까닭에 앞으로는 교육 수준 향상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1980년대의 호황 이래 견잡을 수 없이 팽창에만 급급하던 남쪽 사회의 경제는 1997년에 파열음을 내고 말았다. 수많은 서민들의 희생 아래 비교적 짧은 시간에 뒷수습을 한 정부는 눈앞에 닥친 2000년대를 국민의 기대 속에 맞이하고 싶어 했다. 이를 위해 이른바 ‘밀레니엄 기획단’을 출범시켜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을 사업 항목에 포함하였다. 이는 한국어 교육의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었다. 사실 앞에서 언급한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어세계화재단, 세종학당 등의 대규모 사업은 이러한 뒷받침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 또 세계화의 거친 풍랑에 놀란 마음과 우리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등으로 한때 영어를 미래의 공용어로 삼는 것이 어떠냐에 대한 논쟁도 뜨거웠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덕분에 ‘영어 교육 특구’나 ‘영어 마을’이니 하며 외국어 교육 문제가 부동산 투기와 같은 이윤 추구의 수단처럼 비쳐지면서 제대로 된 영어 공교육에 상처만 남겼다.

8. 다시 만남

1990년대는 또한 남과 북의 학자들이 언어 문제를 둘러싸고 의미 있는 만남을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1994년부터 한국어정보화회는 연변에서 북의 학자들을 만나 여러 번 말문을 텃다. 1996년에는 국립국어원이 중국의 창춘(長春)에서 북의 학자들과 만난 일이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2001년에 베이징에서 북의 사

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와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여건이 닿는 대로 만남을 계속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남과 북의 연결 고리를 자청해 주었던 재중동포 학자들의 소문 없는 공헌은 훗날에도 잊지 말고 기억해 두어야 할 진정 값지고 고마운 일이다.

이때부터 남과 북의 언어 정책 담당자들은 작은 협력 사업부터 미래를 꿈꾸는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을 함께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추진력을 가지게 된 데는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이 큰 힘이 되었다. 소박하게 서로의 언어 자료를 교환하기도 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함께하기도 했다. 그렇게 서로 신뢰를 쌓아 가다가 2004년에는 민족의 언어 유산을 함께 정리하고 고유어의 체계를 더욱더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말에는 남과 북의 방언을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연구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학술적 의미가 있다. 사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단 한 번도 한국어가 어떠한 지역에서 누구에 의해서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정밀하게 조사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빈곤한 토대 위에 표준어가 결정되었다는 것도, 방언권이 설정되었다는 것도, 또 한국어(조선어) 사용자라는 범주를 설정한 것도 매우 이상한 일이다. 우리 자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없었던 탓이다. 실학자 가운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우리의 산하를 실증적으로 담아본 것으로 중요했고, 정약전의 <<자산어보>>가 우리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닌가 한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조사 전문가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큰 규모로 전면 조사를 해야 한다.

전면적인 방언 조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14년과 1924년에 일본인 학자 오구라 신페이가 조선어 방언을 조사했다. 오늘날 우리의

방언 연구는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조사는 매우 허술한 방법론을 사용했다. 우편물을 이용한 조사로, 이러한 조사 결과의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다. 단지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 첫 획을 그었다는 의미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해방 이후에는 몇몇 학자들이 자신의 연고지를 중심으로 단편적인 조사를 시행했다. 좀 빈약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양질의 자료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다 1980년 당시 정신문화연구원(지금의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시행한 광범위한 방언 및 민담 조사는 훌륭한 학술 자료를 남기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남쪽의 자료뿐이고 북쪽의 자료는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다.

2004년에 남과 북이 합의한 방언 조사는 자못 규모가 큰 편이었다. 분단된 남과 북만이 아니라 소수의 지점이지만 중국의 동북 지방과 중앙아시아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정도만 제대로 조사되어도 우리의 언어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제법 신뢰할 만한 과학적 근거를 갖출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시간이 생각보다 더 많이 걸린다는 것이었다. 또 학문 외적인 몇 가지 문제가 일을 더욱더 더디게 만들었다. 역사는 우리에게 더 많은 노력과 참을성을 요구한다.

2007년에는 그 이전부터 준비해 오던 또 하나의 사업이 시작되었다. 겨레말사전의 편찬을 위한 인적 조직이 이루어지고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래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통일부 산하 조직으로 출범한 것이다. 원래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조직이었으나 여러 가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까지 운영 기간이 연장되었다.

분단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은 참으로 스산하다. 그만큼 비정상적 내면화가 심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의 실낱 같은 공동 작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더욱 질기게 하고, 그간의 온갖

문제점과 장애물의 의미를 곱씹으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은 내면화되었던 문제를 외면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내면화된 분단 문제를 외면화하여 각성의 계기로 삼는다는 것은 그 문제의 해결을 앞당길 수 있는 의식적인 계기가 된다. 그런 점에서 지나간 100여 년, 또 해방 70년을 곱씹을 가치는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언젠가 우리는 ‘잃어버린 100년’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해진 100년’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근(1994), 《통일시대의 어문문제》, 길벗.
- 고영진·김병문·조태린 편(2012), 《식민지 시기 전후의 언어문제》, 소명출판.
- 국립국어원(2011), 《국립국어원 20년사》, 국립국어원.
- 김민수(1973), 《국어정책론》, 탑출판사.
- 김민수(1989), 《중보판 북한의 국어연구》, 일조각.
- 김민수(2007), 《현대어문정책론》, 한국문화사.
- 김병문(2000), 말과 글에 대한 담론의 근대적 전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김병문(2011), 《언어적 근대의 기획》, 소명출판.
- 김하수·이승재(2005), 남북 언어, 국립국어연구원(2005) 《국어 연감 2005》, 274~306, 국립국어원.
- 박용규(2012), 《조선어학회 항일투쟁사》, 한글학회.
- 연세대 근대한국학 연구소(2013), 《한일 근대 어문학 연구의 쟁점》, 소명출판.
- 오대환(2009), 식민지 시기 일본인을 위한 조선어 교육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이기문(1970), 《개화기의 국문연구》,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 정재환(2006), 이승만 정권 시기 한글 간소화 파동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정재환(2012), 해방 후 조선어학회·한글학회 활동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한글학회(1971), 《한글학회 50년사》, 한글학회.
- 한글학회(1981), 《50돌 뒤 10년의 한글 학회 발자취》, 한글학회.
- 황선영(1998), 탈식민지화 과정에서의 언어적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